

글로벌 AI 반도체 동맹 속도... 엔비디아·AMD 등 협력 확대

엔비디아, 오는 16일 'GTC 2026'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회동 관심

오는 18일 리사 수 AMD CEO 방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 전망

다음 주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GTC 2026'과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벌 AI 가속기 시장 1, 2위 기업의 수장이 글로벌 행보에 나서면서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엔비디아 행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는 방한기간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간의 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함담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6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GTC 2026을 개최한다. 젠슨 황 CEO는 16일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로드맵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HBM4'를 탑재할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의 개발 상황과 실물 공개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 출시를 앞둔 '베

라 루빈 울트라'의 세부 사양 공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GTC에서 처음 언급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파인만(Feynman)'의 상세 정보 공개 여부 역시 주요 관심사다. 파인만은 베라 루빈의 후속 제품으로, 대규모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 효율을 높인 차세대 칩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CEO의 회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GTC 2026에 처음 참석해 황 CEO와 차세대 엔비디아 플랫폼에 SK하이닉스의 HBM 공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회동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의 리사 수 CEO는 18일 방한해 삼성전자와 네이버 경영진 등을 만날 예정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에도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HBM 공급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6세대 HBM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바 있으며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에도 가장 많은 HBM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AI 가속기 시장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하이닉스는 수출과 양산 속도, 고객 다변화 성과가 향후 경영 성과와 직결되는 만큼 반도체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업계, 불확실성 해소했지만... 노사협상 새로운 쟁점 될 듯

한화오션 퇴직자 최종 패소

성과급, 평균임금 미포함 재확인 일부 성과급은 포함... 논란 여지

노조, 성과급 임금성 인정받기 위해 취업규칙에 지급기준 명문화 가능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인다.

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되면서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 2부(주심 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퇴직자 97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급 기준이 영입이익과 경상이익 등 재무지표에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 제공의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잇따른 판결로 관련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판례로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

지는 남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생산직 노동조합과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 합의 자체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법원은 "회사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봤다. 성과급의 정기적인 지급 의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 관행으로도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1월엔 삼성전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업무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

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던 점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향후 노사 협상 과정에서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측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급 기준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과정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시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라면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식품업계 물가안정 동참 라면·식용유 가격인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식품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심, 삼양식품, 오투기,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정부의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 기조에 부응해 라면과 식용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와 푸레쥬르 등 주요 베이커리도 가격인하에 동참했다.

농심은 4월 출고분부터 라면과 스낵 16종의 가격을 평균 7.0% 내리기로 했다. 대표 제품인 안성탕면(3종)은 5.3%, 무파마탕면은 7.2% 인하한다.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후루룩칼국수, 감자면, 짜왕, 보글보글부대찌개면, 새우탕면과 쫄면스낵(4종) 등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삼양식품도 다음 달 1일부터 삼양라면 오리지널(봉지면·용기면) 2종의 출고 가격을 평균 14.6% 인하한다. 오투기 역시 4월 출고분부터 라면 8종의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가격이 내려가는 제품은 진짬뽕, 굴진짬뽕, 크림진짬뽕, 더핫열라면, 마열라면, 짜슐랭, 진짜장, 진짬뽕 등이다.

식용유 제품 가격도 낮추었다. 오투기는 오투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l·0.9l)와 오투기 해바라기유(0.5l·0.9l) 등 식용유 4종의 출고가를 평균 6% 인하한다. 대상은 청정원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등 소비자용(B2C) 제품 3종, 총 6개 제품의 가격을 3~5.2% 인하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7월 중순 이후 기존관세 수준 복원 구상"

>> 1면 '美 무역법 301조 조사...'서 계속

여분부장은 "301조와 232조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라며 "철강 등은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돼 있고 이번 301조는 그와 별개로 제조업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여분부장은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301조 조사 절차를 진행해 이후 개별 국가별 관세 조치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1조는 일반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4~5개월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122조 조치가 종료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301조를 통해 기존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이슈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구광과 같은 개별 기업 사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분부장은 "작년 11월 14일 한미 간 합의한 관세 수준은 대부분 품목 15%"라며 "미국도 이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301조는 일반적으로 기존 관세 위에 추

가되는 '누적 관세' 구조이지만, 미국도 기존 합의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의의 정신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여분부장은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국내 수요보다 많은 생산을 하고 수출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중간재·부품 수출이 늘어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계와 논리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분부장은 미국 USTR이 곧 강제 노동과 관련된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다는 계획을 전했다. 해당 조사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분부장은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USTR의 공식적인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년동안 강제노동을 통해 제품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제재 내지는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 부분이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련 관심사항"이라고 밝혔다.

여분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이었다"며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